



1인가구 맞춤형
행복정책 시리즈

you're **NOT** alone ④

**당신은
혼자가 아닙니다**



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④

청년 1인가구, “후라이의 꿈”을 응원할게요

※ 후라이의 꿈 : 악뮤 이찬혁이 아이유에게 선물한 곡으로, 올해 8월 발매
계란 후라이처럼 밥 위에 눌러 붙어서, 특별한 꿈 없이 흘러가는 청춘의 삶을 응원한 곡

I 요약 I

■ 청년(40세 미만) 1인가구 특징

- 코로나 직격 : 30세 미만 1인가구의 경상소득 나홀로 감소('18년 313만원→'21년 297만 원)
- 가난한 선진국 세대 : 자발적 1인가구 선택, 부모세대 高자산, 자녀세대의 低소득·低자산
- 고시원 드림 : 반전세 및 비주택 높은 거주비율, 수도권외 상용직 직장, 높은 주거비용

■ 청년 1인가구 정책 한계

- 온정적 간섭주의 : 개인의 이익과 공익을 높이기 위해,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강제 개입 가능
- 결국 결혼 유도 : 국가의 생존 측면에서 결혼·출산에 재정·조세 지원 집중
- 나락에 떨어져야 지원 : 위기가구 중심이며, 이마저도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원 삭감

■ 청년 1인가구 정책

- 정책원칙 ① 지원이 아니라 투자다 ② 선택은 청년이 한다 ③ 거창한 거 필요 없다
- 경제투자 ① 국가 찬스 : 초·중·고 12년간 기금 적립→19세부터 1천만 원 신청·지급
② 젊은 자본 : (정부안)결혼특별공제 1억 원→(대안) 청년특별공제 5천만 원
③ 소득 보전 : 월세세액공제 이월공제 도입, 전세보증금 대출금 이자 지원
④ 주택 마련 : 토지임대형 주택 분양 확대, 생애최초주택 및 오피스텔 취득세 완화
- 생활투자 ① 6평 천장 : 고시원, 오피스텔 등 1인 최저주거면적 기준 확대(기존 4.2평)
② 건강 투자 : 동 단위 체육센터 설립 의무 및 교부세 지원
③ 청년 패스 : 영화관람, 도서구입, 예술관람 등 이용 시 할인 또는 현금 지원
- 문화투자 ① No Paper : 대학교 유료 필기앱 지원, 태블릿PC 교육 및 '종이 없는 회의' 장려
② No CO2 : 자전거 부가세 면제, 1회용 플라스틱 공병제, 정당 현수막 재활용
③ No Kkondae : 다자녀 공무원 승진우대 폐지, 직장 내 부조문화 폐지 등

♣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1. 청년 1인가구 특징

○ 코로나 직격 : 30세 미만 1인가구의 경상소득 나홀로 급감

- 30세 미만 1인가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3년 동안 경상소득이 4.9% 하락(-152만 원)
 - 공적(63만 원) 및 사적(4만 원) 이전소득이 67만 원 증가했으나, 근로소득 -194만 원, 사업소득 -25만 원, 재산 소득 -1만 원 등 시장소득이 220만 원 감소하여 총소득 크게 감소
- 신규인원 채용 감소 등으로 인해 30세 미만 1인가구의 피해가 가장 컸음

[표 1] 코로나19 전후 1인가구 여부별 경상소득 변화

(단위: 만 원)

	1인가구			2인이상가구		
	2018	2021	증가율	2018	2021	증가율
30세 미만	3,126	2,974	-4.9%	4,568	6,192	35.5%
30대	3,459	4,278	23.7%	6,490	7,989	23.1%
40대	3,490	3,859	10.6%	7,855	8,555	8.9%
50대	2,358	2,933	24.4%	8,121	9,074	11.7%
60대 이상	1,429	1,765	23.5%	4,952	5,894	19.0%

주: 경상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으로 구성

자료: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민주연구원 "1인가구, 정책패러다임의 담대한 전환"재인용

○ 가난한 선진국 세대 : 자발적 1인가구 선택, 부모세대의 고자산, 자녀세대의 저소득·저자산

- 1인가구 비율('15년→'22년): 남성 감소(42.2%→40.8%), 여성 증가(28.6%→30.8%)
 - 결혼관 변화에 의한 혼인인향을 가진 미혼 비율 지속적 감소 영향
 - 1인가구 비자발적 사유: 20대남성(본인직장, 본인학업), 30대남성(본인직장) 20대여성(본인직장, 본인학업), 30대여성(본인직장, 가족사정)
- 고성장·고자산의 부모세대 하에 자녀세대는 선진국 세대(OECD '96년 가입)로 성장했으나, 청년 1인가구 소득은 소득하위 1~3분위 집중됐고 자산은 하위 1분위 비중이 가장 많았음

[표 2] 청년가구의 1인가구 여부별 소득 및 자산 분포

(단위: %, %p)

	1인가구		2인이상가구		차이	
	소득	자산	소득	자산	소득	자산
하위 1분위	24.4	41.9	4.3	11.8	20.1	30.1
2분위	39.7	36.7	13.6	21.1	26.0	15.6
3분위	24.4	12.3	25.7	27.5	-1.3	-15.2
4분위	7.6	8.0	32.5	24.4	-25.0	-16.4
5분위	4.1	1.1	23.9	15.2	-19.8	-14.1

주: 소득은 2021년, 자산은 2022년 기준

자료: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민주연구원 분석

○ 고시원 드림 : 높은 반전세 및 비주택 거주비율, 수도권 상용직 직장, 높은 주거비용

- 남성청년 1인가구를 중심으로 고시원(고시텔) 거주비율이 높은 편
 - 남성 66,979가구(20대 15.4%, 30대 9.8%), 여성 39,704가구(20대 11.4%, 30대 3.6%)
- 수도권 거주비율 증가 : (‘15년) 52.6%→(‘18년) 53.5%→(‘22년) 55.4% (男49%, 女65%)
 - 일자리 및 생활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인. 여성 1인가구의 수도권 거주비율 높음
- 1인가구의 자산은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이 많고 실물자산이 적어서 2인 이상가구의 1/3 수준
- 높은 주거비용 : 소득은 2인 이상가구의 절반이나 주거비용은 90%에 육박

[표 3] 청년 1인가구 및 2인 이상가구 비교

(단위: 만 원)

	1인가구		2인 이상가구		차이	
	소득	자산	소득	자산	소득	자산
하위 1분위	24.4	41.9	4.3	11.8	20.1	30.1
2분위	39.7	36.7	13.6	21.1	26.0	15.6
3분위	24.4	12.3	25.7	27.5	-1.3	-15.2
4분위	7.6	8.0	32.5	24.4	-25.0	-16.4
5분위	4.1	1.1	23.9	15.2	-19.8	-14.1

주: 소득은 2021년, 자산은 2022년 기준

자료: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민주연구원 분석

2. 청년 1인가구 정책 한계

○ 온정적 간섭주의 : 개인의 이익과 공익을 높이기 위해,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강제 개입 가능

- 사회여론 “얼른 장가 가서, 토끼 같은 자식 낳아, 행복하게 살아야지”
 - “거위의 꿈, 달팽이의 꿈, 네모의 꿈은 지지하지만, 후라이의 꿈은 안 돼”
- 청년 1인가구를 완성형이 아닌 과도기형으로 판단하고, 끊임없이 3-4인 ‘정상가족’ 범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정부정책 및 문화가 상존

○ 결국 결혼 유도 : 국가의 생존 측면에서 결혼, 출산에 재정·조세 지원 집중

- 1인가구 수요 : 사회적 관계망, 경제적 독립, 건강관리, 커뮤니티 공간 확보 등
- 정부정책 : 국가 전체 측면에서 결혼·출산을 유도
 - 하락하는 출산율 0.78명을 높이기 위해 주로 결혼 및 출산에 정책역량 집중
 - 혼인증여공제 1억 원 도입, 자녀장려금 확대, 출산·양육수당 강화,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

○ 나락에 떨어져야 지원 : 위기가구 중심이며, 이마저도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원 삭감

- 윤석열정부의 1인가구 정책은 ‘약자복지’의 연장선
- 다만, 현 정부는 2023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원 삭감하는 등 주거약자 보호 미흡

3. 청년 1인가구 정책

(1) 수요자 중심의 정책 원칙

① 지원이 아니라 투자다

- MZ생각 “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면, 우리에게 지원하지 말고 투자하세요”
- 청년 1인가구를 약자로 보고 지원하기보다 보편가구로 보고 투자할 필요

② 선택은 청년이 한다

- MZ 생각 “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‘선택할 자유’를 보장해달라”
-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1인가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

③ 거창한 거 필요 없다

- MZ 생각 “실행불가능한 고액 공약(空約)보다 실현가능한 소액 공약(公約)이 낫다”
- 작은 제도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사구시 제도 설계 필요

(2) 경제투자정책

① 국가찬스 프로그램 : 초·중·고 12년간 기금 적립→19세부터 1천만 원 신청·지급

- MZ 생각 “엄청난 정책보다 대학교 등록금, 반전세 보증금 정도도 정말 간절합니다”
- 기금 적립 : 만7세~만18세 학령인구 인원에 대해 1인당 연 70만 원씩 청년자산통장 적립
 - 정세균 대선후보 공약 : 청년씨앗통장(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, 만19세 청년에게 1억 원 적립)
- 기금 재원 :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씩 분담
 - 학령인구 감소(’23년 533만 명→’25년 510만 명→’30년 407만 명)로 인해 소요재원 감소
 - 총 예산(조 원) : ’24년3.7→’25년3.6→’26년3.4→’27년3.3→’28년3.2(5년간) 17.2
 - 중앙정부(조 원) : ’24년1.8→’25년1.8→’26년1.7→’27년1.7→’28년1.6(5년간) 8.6
 - 최근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육청 예산감소(지방교육재정교부금)를 고려해 분담비율 조정 가능
- 기금 지급 : 만19세 이후 개인의 필요에 따라 1천만 원 신청 및 지급
 - 월 5.8만 원, 연이자율 3%, 가입기간 144개월 적금의 만기지급액 1천만 원
 - 다만, 현재 초·중·고 학생은 적립기간에 따라 지급 (예) 중3 학생 : 3년 적립, 217만 원

[표 4] 국가 찬스 프로그램의 현재 학년별 지급액

	고2	고1	중3	중2	중1	...	초3	초2	초1	만6세
적립기간(년)	1	2	3	4	5	...	9	10	11	12
지급연도(년)	2025	2026	2027	2028	2029	...	2033	2034	2035	2036
지급액(만 원)	70	143	217	294	374	...	715	807	902	1,000

주: 기금수익률 3%, 비과세, 월 5.8만 원 적립 가정

자료 : 민주연구원

② 젊은자본 프로그램 : (정부안) 결혼특별공제 1억 원→(대안) 청년특별공제 5천만 원

- MZ 생각 “엄청난 정책보다 대학교 등록금, 반전세 보증금 정도도 정말 간절합니다”
- 현행 : 직계존속은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(10년)까지 적용. 소액의 증여금액은 비과세
 - 직계존속 공제액은 2014년 5천만 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유지
 - 증여세 신고현황(21년) : 26.4만 건, 증여재산가액 50.5조 원(1.91억 원/건), 세액 8.4조 원
- 정부안 : 결혼하는 인원에 한해 증여세특별공제 1억 원 허용
 - 혼인자녀에 5억 원 증여 시 1인당 2,910만 원 세부담 완화, 비혼인 1인가구에 대한 형평성 문제
- 대안 :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에 한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허용
 -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(현행 3%→1%, 연간 세수효과 5,200억 원)를 통한 재원 마련

③-1 소득보전 프로그램 : 월세세액공제 이월공제 도입

- MZ 생각 “월세는 봉인가요?”
- 현행 : 근로자는 15~17%의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전세대출을 낀 전세와 유사 부담 수준
- 문제점 : 청년세대는 소득이 작아서 낼 세금이 소액이면, 월세공제를 전액 적용받지 못함
- 대안 : 5~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청년 1인가구의 미래 소득 증가 시 공제 적용
 - 이월공제 세법 조항 : 기부금, 중소기업 손실 등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

③-2 소득보전 프로그램 : 무주택 중·저소득 전세보증금 대출금 이자 지원

- 전세보증금 이자상환 지원 강화 : 버팀목대출 예산 증액 및 임차보증금 기준 완화

④-1 주택마련 프로그램:토지임대형 주택 전국단위 분양

- 개념 : 정부가 토지를 보유하고, 건물을 민간에 분양하는 주택
- 장점 : 저렴한 가격에 최대 80년간 실거주 / 단점 : 토지 임대료 매월 납부, 미미한 투자수익
- 사례 : 서울시 ‘뉴:홈 나눔형(토지임대부주택)’ : 저렴한 분양가 덕에 분양 성공
 - 고덕강일 1차(23.2월, 3.55억 원) 및 2차(23.6월, 3.14억 원), 마곡(23.10월, 3.11억 원)
- 대안 : 대안주택 형태로 전국단위 시행 확대

④-2 주택마련 프로그램:생애최초주택 취득세감면 확대

- MZ 생각 “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건데, 꼭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나요?”
- 현행 :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
 - 취득가액별 감면효과 : 2억 원 이하 100% 면제, 4억 원 50% 면제, 6억 원 33% 면제
- 대안 : 생애최초주택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확대취득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작은 평수의 경우 세제 혜택 고려
 - 취득가액별 감면효과 : 3억 원 이하 100% 면제, 4억 원 75% 면제, 6억 원 50% 면제

④-3 주택마련 프로그램:오피스텔 취득세 최대 75% 완화

- MZ 생각 “오피스텔이라도 사고 싶은데, 취득세가 너무 비싸다”
 - 상대적으로 저렴한 ‘주거용 오피스텔’은 청년세대의 현실적인 내집마련 선택지 중 하나
- 문제점 : 주택으로 간주하여 규제하면서 세금·대출 등 모든 면에서 주택보다 불리
 - 국세인 소득세는 주택으로 간주하지만, 지방세인 취득세는 비주택으로 간주하여 고세율 적용

- 주거용 오피스텔 : 높은 취득세율(4.6%), LTV 40%, 주택으로 취급 중부세 주택수 포함, 일반대출(금리 6~7%, 8년 만기) ⇒ 불리한 DSR ⇒ 낮은 대출한도
- 주택 : 낮은 취득세율(1.1~3.3%, 생애최초 면제~0.55%), 특례보증자리론 적용
- 대안 : 주택으로 취급하여 취득세율(1~3%) 및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등 적용
- 시가 4억 원 취득세 비교 : 오피스텔 1,840만 원→주택 440만 원(생애최초 220만 원)

(3) 생활투자정책

① 6평 천장 : 고시원, 옥탑방 등 1인 최소주거면적 기준 단계적 확대

- 헌법35③ “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
- 현황 : 1인가구의 최저주거면적 14㎡의 방 1개, 입식부엌, 전용 수세식 화장실, 목욕시설
 - 「주거기본법」 제17조 및 「주거기본법시행령」, 국토교통부 고시
- 문제점 : 주거기본법 '04.6월 제정→'11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별집 오피스텔, 좁은 원룸 등으로 인해 1인가구 삶의 질 저하
- 대안 : 준주거시설에 대한 최소주거면적 허가기준 단계적 강화
 - LH는 2021년 초소형주택에 대한 비선호도를 고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21㎡ 이상으로 설정
 - 고시원, 옥탑방, 오피스텔 등 : 14㎡(4.23평)→21㎡(6.35평)→25㎡(7.56평)→30㎡(9.07평)

② 건강 투자 : 동 단위 체육센터 설립 의무 및 지방교부세 지원

- 동 단위 최소 1개 이상의 국공립 체육센터 설립 의무 및 다양한 체육, 문화 프로그램 운영
- 현재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(종합부동산세 재원)의 일부를 체육센터 설립에 투자. 지역 건강지표 및 관련 시설 현황을 교부세 안분기준에 반영 검토

③ 청년 패스 : 영화관람, 도서관, 예술관람 등 이용 시 할인 또는 현금 지원

- MZ 생각 “왜 취업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하지? 내 삶 전반을 지지해주면 안되나?”
- 문제점 : 문화 소비활동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족
- 해외사례 : EU의 유럽청소년카드, 프랑스 문화패스, 캐나다 학생 할인(학생증 소지 시 학생 계좌, 전자제품, 의류, 마트 등 다양한 할인 적용), 애플의 학기 초 교육할인
- 대안 : 청년들의 문화활동, 소비활동, 여가활동 등을 지원단계적으로 청년지원 사업(수당, 배당 등)의 통합적 지급 수단으로 확대

(4) 문화투자정책

① No Paper : 대학교 유료 필기앱 지원, 태블릿PC 사용 교육 및 ‘종이 없는 회의’ 장려

- MZ 생각 “부모세대들이 사용하는 종이만큼 내가 줄이겠다”
- 굿노트·노타빌리티·플렉스 등 유료 필기앱을 대학교 학생지원 프로그램(워드·엑셀, 한글 등)에 추가하고, 정부가 대학에 예산 지원
 - 상당수 대학생은 태블릿PC를 이용해 필기. 수십 년간 운행한 대학교 앞 인쇄소 최근 다수 폐업
- 최고위원회, 실무회의 등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해 ‘종이 없는 회의’ 진행

② No CO2 : 자전거 부가가치세 면제, 착한자판기(1회용 플라스틱 공병제), 정당 현수막 재활용

- MZ 생각 “지구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다. 생활에서 CO2를 줄이고 싶다”
- 일정 금액 이하의 자전거 부가가치세 면제
 - 모든 자전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, 고가 자전거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
- 착한자판기(1회용 플라스틱 공병 회수 자판기)
 - 해외사례 : 독일 공병환수제도(Pfand) - 플라스틱(개당 0.25유로), 공병
 - 대안 : AI기술을 활용한 공병 회수 자판기를 개발하여 대형마트, 중형마트, 편의점 등 비치
- 정당 현수막 재활용
 - 문제점 : 정당 현수막 급증으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침
 - 대안 : 폐현수막 재활용(환경 정비용 마대, 재설용 모래주머니, 예코백 등 제작)

③ No Kkondae : 다자녀 공무원 승진우대 폐지, 직장 내 부조문화 폐지, 끈대 예방교육 의무화

- MZ 생각 “다자녀를 우대한다고? 지금이 20세기야, 21세기야”
- 다자녀 공무원 승진우대 폐지
 - (정부안) 정부는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과정에서 다자녀 공무원에게 가점 부여 계획*
 - * 인사혁신처(2023.10.16.) “공무원임용령 개정안”
 - (문제점) 1자녀 이하 부부 또는 1인 청년가구에게 차별적으로 작용. 위험 요인
- 직장 내 부조문화 폐지
 - 우리 고유의 문화이나 가족수가 적은 1인가구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불합리한 직장내 부조 관행을 없애는 차원에서 접근 필요
 - 부조 관련 공지, 부조금 봉투 비치 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문화 개선 필요
-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등과 동일 수준에서 끈대 예방교육 의무화 검토